

4. 중국의 최근 수입규제 조치와 향후 전망

□ 최근 수입규제의 배경

단기적으로는 적정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,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임

- (적정 무역 수지의 유지) 작년 하반기 들어 수출 감소가 두드러져 무역 수지흑자 규모의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9월, 10월, 11월 수출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.7%, 17.3%, 9.7% 감소하였음
 - 외환보유고 역시 98년 1월 1,406억 달러에서 98년 11월 1,405억 달러로 오히려 줄고 있음

<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>

	1996	1997	1998	1999(e)
GDP증가율(%)	9.7	8.8	7.8	7
공업생산증가율(%)	13.1	10.9	8.8	-
소매물가상승률(%)	6.1	0.8	-2.6	-
소비자물가상승률(%)	8.3	2.8	0.8	-0.3
무역수지(억 달러)	122	403	450	
수출(증감율, %)	1,510(1.5)	1,827(20.9)	1,820(-0.5)	- 2% 내외
수입(증감율, %)	1,388(5.1)	1,424(2.5)	1,370(-3.8)	- 5% 내외

주 : 소비자 물가지수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가격지수임

자료: 國家統計局, 國家計劃委員會 經濟研究所

- (국내시장 보호) 최근 심해지고 있는 해외 기업의 덤핑 공세로 인한 가격 교란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함
 - 중국은 가능한 한 인민폐 평가절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, 이 경우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보다는 내수 부양이 될 것으로 전망됨
 - 장기적으로는 내수 부양 정책의 효과를 국내 재고 소진 및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돌리기 위한 국내 시장 보호 정책과 민족 공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이해할 수 있음

주요 경제 현안

□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

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나 쿼타제를 실시. 또한 밀수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“走私(밀수)犯罪偵察局”이라는 독립부서를 설치

- 지난 11월말 ‘저가덤핑 공산품 부당가격행위 제재에 관한 규정’을 공포하였으며, 가격 덤핑이 심해진 21개 품목에 대해 가격 통제 조치를 취하였음
 - 이 규정은 저가 덤핑 제재를 위한 중국 최초의 종합적 법안으로 덤핑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중국내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임
 - 철강, 판유리 등 중국의 주요 산업 제품에 대한 덤핑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이 대폭 축소된 상태임
- 높은 관세 외에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실시중임
 - 313개 품목에 대해서 자국산업 보호 명분으로 수입 물량과 수입 가능 업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입허가 및 쿼타제를 실시함
 - 100개 품목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수입함으로써 수입 물량을 규제함
- 올해부터 밀수 단속을 위해 “走私犯罪偵察局”이라는 독립부서를 설치
 - 6,000여명에 이르는 강력한 전담경찰까지 19개 주요 세관에 배치함
 - 밀수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군대의 기업 경영 활동을 금지하기로 함

□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이며, 관세 장벽보다는 쿼타 제한, 반덤핑 조치, 밀수 단속이 지속될 전망

- 지난 12월 國家計劃委員會 산하 經濟研究所에서 발표한 99년 전망 보고서에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지닌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
 - 특히 이 보고서는 내수 부양책의 효과를 재고 소진 및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돌리기 위한 국내 시장 보호 정책과 민족공업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내수 부양을 위해 반덤핑 규제는 더욱 심화될

것으로 보이며, 특히 외국 투자 기업 제품 및 수입 제품의 가격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

- 향후 중국 정부는 수출 증대보다는 내수 부양에 힘쓸 것으로 보이나, 내수 부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임
 - 올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및 아시아국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수출 증가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큼
 - 이 경우 人民幣 평가절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
-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수입 억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관세 장벽보다는 쿼터제한, 반덤핑 조치, 밀수단속 강화 등이 주요 조치로 사용될 것임
 - 밀수 단속의 경우 우리 기업의 적법적 절차를 거친 수출도 중국 수입업자들의 의도에 의해 밀수의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
 - 지난해 7월 한국산 신문용지에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화학제품의 경우 우리 유화제품 수출의 40%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덤핑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충격은 클 것으로 보임
- 한·중 정부간의 협의를 통한 국내 기업의 보호 및 기존 수출선 점검, 가격보다 품질 위주의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요망됨
 - 작년 1~10월 한국에서 집계한 한국의 對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98억 700만 달러, 53억 7,900만 달러로 무역 흑자는 44억 2,800만 달러인데 비해, 중국 집계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49억 2,200만 달러에 불과함
 - 이는 우리의 對중국 수출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밀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, 따라서 더욱 세심한 수입선 관리가 필요함
 - 중국 시장에의 진출 방식도 이전의 가격 경쟁이 아니라, 고급품 위주의 품질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, 따라서 철강,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생산 전환이 필요함

(황 동 언 hde@hri.co.kr ☎724-4055)